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 김동수 · 김용순 · 김현욱 · 이우태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 김동수 · 김용순 · 김현욱 · 이우태

KINU 통일연구원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인 쇄 2013년 2월
발 행 2013년 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704-8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ii

Ⅰ. 서론 1

Ⅱ.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5

1.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7
2.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11

Ⅲ. 미중 관계와 미국의 외교정책 19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 22
2.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24
3. 미중간의 군사적 경쟁 27
4. 결론 33

Ⅳ.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35

1.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 37
2. 한미동맹과 중국 44
3. 결론 48

Ⅴ. 대북한 외교정책: 지속인가 변화인가 51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53
2.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56
3.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62
4. 결론 66

Ⅵ. 결론 69

참고문헌 75

최근 발간자료 안내 81

표·그림 목차
Tables

〈표 1〉 미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 25
〈표 2〉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26
〈표 3〉 2001년~2010년 중국의 군사비지출 28

〈그림 1〉 중국군 현대화율 27

요 약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이 연구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시아, 특히 대북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첫 번째는 향후 4년 동안 변화보다는 1기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핵심이다. 이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미국이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관계 정상화와 경제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지만,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비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전략적 인내'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정책을 주로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과거 '전략적 인내'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양자 혹은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또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인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좀 더 관여(engagement)지향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중국을 포함한 대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기초로 대동북아시아, 특히 대중국 외교정책에서 두 가지 장기적인 정책, 즉 협력과 경쟁의 기조를 유지

할 것이라 예상한다. 아시아가 경제, 군사, 정치적 이익과 관련하여 미국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중국을 겨냥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이를 바라보는 상반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사실 낙관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 모두 공통적으로 오바마 2기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강압정책과 협상과 대화가 주를 이루는 관여정책을 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두 시각의 분명한 차이는 각각이 다른 곳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볼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과거보다 관여지향적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북한의 의지와 태도'라는 점 또한 강조할 것이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로 쉽게 전용될 수 있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 이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경제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을 포함한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존 케리를 힐러리 클린턴을 대신해 새로운 미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를 지지했던 클린턴 전 미국무장관과 달리 북한 핵문제를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 양자회담을 재개하거나 혹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태도와 북한 내부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변화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 줄 때에만 오바마 2기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비록 몇 가지 조건을 두긴 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동안 밝힌바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조속한 회담 개최는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취할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힘을 실어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와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공통 관심사에 관한 합의점을 고려해볼 때,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양국간 정책공조만이 평화적이면서 성공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오바마 행정부, 북한, 미국 정책,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재균형, 한미동맹, 핵확산, 박근혜 정부

Ⅰ. 서론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12년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더 미국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쏠려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대동아시아 정책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과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도 이 지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향후 4년 동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은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변화보다는 정책의 지속성이 향후 4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가 대세를 이루었다. 이 정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지만,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비관적인 시각은 '전략적 인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양자 혹은 다자 간 대화와 협상을 더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각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 시각은 미국 외교정책을 둘러싼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더욱 관여(engagement) 지향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떠한 시각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북아 혹은 대북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동북아 정책을 다룬다. 또한, 이 장은 소위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을 1기 오바마 정부의 대동북아 외교정책의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장은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와 향후 4년간 양국사이의 예상되는 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또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 정책에 대한 기초 분석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Ⅳ장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좀 더 구체적인 지역정책, 즉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Ⅳ장은 또한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 관계 전망을 주로 다룰 것이다. Ⅴ장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본다.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다룰 것이다.

Ⅱ.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롬니를 누르고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세계의 관심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1기 재임시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다수의 미국 고위관리들 역시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아시아로 옮겨 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정책이 향후 4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국가, 특히 중국과 긍정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중국에 억지정책을 펼치며, 현재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패권 국가의 등장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1기 행정부 때 제시됐던 정책을 기초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기존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발전적 파트너십을 확립하며 아시아에서의 다자간 공동정책에 적극 관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패권의 등장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국의 경제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1.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자유주의 노선과 현실주의 노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국내외 상황 때문에 그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취임 후 처음 3년 동안 오바마 대통

령은 정의와 평화, 안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한 진보적인 태도를 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1] 이러한 비판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특정한 사안에 있어 미봉책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의 외교정책이 대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약화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는 다소나마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2012년 12월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두 전쟁을 끝냄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책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14만 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해 있었는데 알카에다가 파키스탄으로 기지를 옮기면서 미국의 테러방지전략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라크전이 마무리 되고 난 후 미국은 효율적으로 군대와 정보력을 테러대응전략, 특히 알카에다 소탕작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2014년 아프가니스탄전이 종결되고 나면, 미국은 2012년 5월에 체결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전략적 제휴협정을 근거로 보다 효율적으로 테러방지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성과는 핵무기 사용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러시아와 맺은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핵운반 시스템, 전술핵무기, 그리고 현장 배치되지 않은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1]- Martin S. Indyk, Kenneth G. Lieberthal, and Michael E. O'hanlon, *Bending History: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CTBT)'과 검증할 수 있는 '무기용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추구할 것이다. 그는 또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하여 유엔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경제 및 에너지 제재를 가할 것이며, 군대를 투입하는 경우도 배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1기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012년 강령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세계경제 발전, 강한 군사력, 그리고 보편적 가치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다양한 국제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이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2]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더욱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3]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0월 22일 TV 토론회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제가 튼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국방예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방정책을 위해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미국의 국방 예산은 10년 후 5천억 달러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는 대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대전략은 미국 외교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국내외 상황을 판단하여 무엇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2- 실업률이 2010년 11월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연방준비은행의 3차 양적완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역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2009년 대비 33.5% 증가).

3-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Moving America Forward: 2012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September 4, 2012 <http://www.democrats.org/democratic-national-platform>.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익증진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이 아니라 단지 미봉책에 불과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또 다른 과제는 '소프트 파워'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해 외교정책을 펴고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소프트 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소프트 파워란 강압보다는 설득을 통한 힘, 국가간 우호적 관계를 통한 안보, 그리고 강한 군사력보다는 공공외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한 힘을 의미한다.[4]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다각적 이상주의와 현실적 실용주의의 결합이 특징이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위기의식이 생겨났다. 그 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은 적극적 군사개입을 통하여 일방적인 패권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원칙을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한 다자주의로 바꾸고자 노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이상주의에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현실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벌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4]- Richard Fontaine and Kristin M. Lord (eds.), *America's Path: Grand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2).

2.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핵심이 바로 아시아재균형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권 초기부터 시행되어 왔다. 대아시아 외교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미국 내 정치·경제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또는, 미국 혹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받는다면 중동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사항이 될 것이고, 결국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두 번째로 밀려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국내정치의 역기능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다.

중동과 국내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계속해서 '아시아로의 복귀(return to Asia),' '아시아로의 중심 축이동(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 및 강화시킬 것이라고 줄곧 공언해왔다. '아시아로의 중심축이동' 정책은 미국의 세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패권적 입지를 더욱 공고화하기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전환시키고, 지역패권에 대한 도전자로 부상하는 중국의 빠른 경제적·군사적 성장세를 견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호주 하원연설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이곳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장기적이고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5] 토마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의 목표는 이 지역의 규칙과 규범의 확립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6]이라고 말하였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이다"[7]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1월 동서문화센터에서 열린 연설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21세기에 세계의 정책적·경제적 무게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국가경영(statecraft)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교적·경제적·전략적으로 상당히 증가된 투자를 이 지역에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다"[8]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November 17,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wp_login_redirect=0>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6- Tom Donilon, "America is back in the Pacific and will uphold the Rules," *Financial Times*, November 27, 2011 <http://www.ft.com/cms/s/0/4f3febac-1761-11e1-b00e-00144feabdc0.html#axzz2HrWQMyNa>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7-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FP)*,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wp_login_redirect=0>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8- Paul Ekert, "Clinton declares America's Pacific Century," *Reuters*, November 10,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11/11/us-apec-usa-clinton-idUSTRE7AA0GJ20111111>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다음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몇 가지 내용들이다.[9]

① 미국 군대를 호주에 새로이 배치, 싱가포르에 미국의 해군 배치, 필리핀과 군사협력 강화

②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방예산이 감축되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은 보다 강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

③ 지역의 중요한 다자기구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가입

④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직하기 위한 9개국 협상에서의 진전[10]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의 몇 가지 전략적 조정 사항들을 내놓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로의 복귀(return to Asia),'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외교정책 개념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 미국의 외교정책을 강조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국가의 지위를 누려왔고 이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예를 들면, 부시 행정부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당시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고, 이 지역에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군대 주둔 방안

9- Mark E. Manyin, Stephen Daggett, Ben Dolven, Susan V. Lawrence, Michael F. Martin, Ronald O'Roukre, and Bruce Vaugh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012), p. 1.

10- 현재 협상국은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 그리고 미국으로, 모두 9개국이다.

을 모색했음은 물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인도,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은 미국이 새로이 채택한 외교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및 경제이익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했다"[11]는 오바마 행정부의 신념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아시아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수입시장임과 동시에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미국은 아시아가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이 미래의 미국 경제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12] 둘째,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국의 패권국가로서의 지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패권국가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은 연방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조치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과 적극적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것, 둘째는 중국에 억지정책을 폄으로써 새로운 지역 패권국가의 부상을 막는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은 앞에서 밝혔듯이 다자적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의 혼합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

[11]- Mark E. Manyi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p. 6.

[12]- *Ibid.,* p. 6.

2012년 11월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존 케리와 척 헤이글을 각각 '미국외교'와 '국가안보'의 차기 수장으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1일에 미 상원외교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의장이었던 존 케리가 차기 국무장관으로, 2013년 1월 7일에 전 상원의원 척 헤이글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미 상원외교위원회에서 27년간 활동하면서 경륜이 풍부한 존 케리 전 상원의원은 이른바 전형적인 비둘기파(평화와 대화를 선호하는 정치인)로 인식되어왔으며, 미국 정치권에서 지적인 친관여적 실용주의자(pro-engagement pragmatist)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바마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견제와 협력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상원의원 시절에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 찬성하였지만, 청정에너지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 재산에 대한 침해를 비난한바 있다. 2011년 1월에 미국진보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했던 연설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경제는 전쟁이 아니다…그리고 중국의 급부상이 우리가 일구어낸 국제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일도 없다. 사실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체제를 새롭게 전환하고, 21세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13]라고 말했다.

13- Yingzi Tan, "Kerry Tipped to replace Clinton," *China Daily USA*, September 5, 2012 <http://usa.chinadaily.com.cn/2012-09/05/content_15735336.htm>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하여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주장해왔다. 2004년에 케리 장관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필요하면 언제든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그의 견해는 2004년도 민주당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을 유지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의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14]고 말했다.

또한 2011년 6월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고 견고하지만,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현재의 강한 제재와 한국·일본과의 강도 높은 협조 방식은 상황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도 불충분하다…최선의 방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15]라고 밝혔다.

척 헤이글 지명자도 중국·북한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헤이글 지명자는 2010년 11월에 장예쑤이(张业遂) 주미 중국대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는 "공통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미중관계를 상호 유익한 관계로 발전시킬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와 공통의 지정학적 관심사로 결속되어 있다면, 한층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14- The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The 2004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for America," July 27, 2004 <http://www.presidency.ucsb.edu/papers_pdf/29613.pdf>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15- John Kerry, "U.S. and North Korea: The land of lousy options," *Los Angeles Times*, June 26, 2011 <http://articles.latimes.com/2011/jun/26/opinion/la-oe-kerry-north-korea-20110626>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것"[16]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 당시, FPA의 편집장인 로버트 놀란과 가진 인터뷰에서 헤이글 지명자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언급하는 한편, 다른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환영해야 한다.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이 그렇듯이, 중국은 곧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큰 문제도 안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이고, 독재정권이며, 불투명한 정부이다. 중국은 투명성이 없다…오늘날 중국은 큰 힘을 가진 나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세계에서 우리가 올라 선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걱정해서는 안 된다"[17]고 말했다.

헤이글 지명자는 북한문제에 대하여 온건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었을 때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바 있다. 또한 2003년 2월 PBS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 혹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다…북한은 너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거 변덕스러운 행적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16- Don Walton, "Chuck Hagel, ambassador explore changing U.S.-Chinese relationship," *Government & Politics*, November 10, 2010 <http://journalstar.com/news/local/govt-and-politics/chuck-hagel-ambassador-explore-changing-u-s--chinese-relationship/article_e082f10c-ed52-11df-b94e-001cc4c03286.html>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17- Robert Nolan, "Chuck Hagel, in His Own Words, on U.S. Foreign Policy Challenges," *U.S. News & World Report*, January 3, 2013 <http://www.usnews.com/opinion/blogs/world-report/2013/01/03/chuck-hagel-on-afghanistan-syria-and-china>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감정을 자제하고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8]고 밝혔다.

따라서 오바마 2기 행정부 외교정책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비둘기파'와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1기 때보다 '대화(dialogue)'와 '절제(restraint)'가 강조된 정책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기존 동맹관계에 대한 지속적 강화, 중국과의 발전적 파트너십 관계 확립, 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 관여, 새로운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 방지, 아시아에 추가적 군사배치, 지역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이익 도모, 지역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과 같은 앞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기초로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18- Josh Rogin, "Chuck Hagel does not like sanctions," *Foreign Policy*, December 17, 2012 <http://thecable.foreignpolicy.com/posts/2012/12/17/chuck_hagel_does_not_like_sanctions>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Ⅲ. 미중 관계와 미국의 외교정책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확대해왔으며, 미국은 1953년에 한국과, 중국은 1961년 북한과 동맹을 구축한 바 있다. 냉전시기 남북한 모두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과 안보를 위해 과도하게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였으며,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 환경도 여전히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양극체제를 유지하였다. 게다가 미중 양국의 영향력은 1990년대 이후부터 계속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되어왔다. 예를 들면,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주요 협상국이었고,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현재 안보 환경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나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물론이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아서 이 두 강대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은 물론, 북한이 한국과 전 세계에 일으키는 문제들에 있어서 미중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30년간 성장 속도나 규모면에서 중국경제는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동시에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대함 탄도미사일(ASBM)과 같은 첨단무기와 확대된 세력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ies)의 발전 노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민해방군 현대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과 소모적인 군사적 경쟁(debilitating military rivalry)을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직후, 전 세계 금융위기, 핵확산방지, 기후변화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전 세계적, 지역적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2009년 7월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의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19]이라고 공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세계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적극적인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이 공존하기 위하여 미국은 중국에 국제법과 규범을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G-20,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비록 중국이 미국이 주도한 제재안에 반대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성공적으로 협력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G-20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틀 안에

19-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uly 2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서 세계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왔다.[20] 미국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규범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경제의 동반자로서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급부상의 파급효과'에 대해 불안해하는 지역국가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명도(visibility)'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자국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였고 신흥 개발도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2011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와 같은 지역 다자기구에 참가하였다.

요약하면,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대중국 전략으로 양면적 접근법(two prolonged approach)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 건설적인 행동을 장려하며, 중국의 잠재적인 지역패권에 반감을 가지는 지역국가의 수장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강하고 믿을만한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21]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정책이 양면적 접근법, 즉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기초를 둔 '협력'과 '경쟁'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는 미국에게 경제·군사·정치적 이익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

[20]- Susan V. Lawrence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012), p. 3.

[21]- Mark E. Manyi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p. 18.

형 정책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이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재균형 정책이 어느 특정한 국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재균형 정책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커져가는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의식한 반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2] 중국을 염두에 둔 이러한 재균형 전략은 주로 경제와 군사분야에 해당된다.

2.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이다. 2011년 IMF의 추정치[23]에 따르면 미국의 명목 GDP(150,600억 달러)는 중국(69,800억 달러)보다 아직은 더 크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중 하나이고 두 국가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의 중요한 경제중심지가 되었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미국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년동안 계속해서 증대되어왔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동반자이자 가장 큰 자원 수출국이며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표 1> 참조)

22- Mark E. Manyi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p. 8.

2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index.aspx>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표 1 미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 (단위: 100만 달러)

수출				수입		
순위	국가	2010	2011	국가	2010	2011
1	캐나다	249,105	280,890	중국	364,944	399,362
2	멕시코	163,473	198,378	캐나다	277,647	315,347
3	중국	91,881	103,939	멕시코	229,908	262,864
4	일본	60,486	65,706	일본	120,545	128,925
5	영국	48,414	55,881	독일	82,429	98,663
6	독일	48,161	49,156	한국	48,875	56,661
7	한국	38,846	43,415	영국	49,775	51,236
8	브라질	35,425	42,944	사우디아라비아	31,413	47,476
9	네덜란드	34,939	42,351	베네수엘라	32,707	43,256
10	홍콩	26,570	36,449	대만	35,846	41,405

출처: 미 상무부 조사국 해외무역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은 중국이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표 1>에 따르면 2011년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의 총 수입은 3,990억 달러(2010년 대비 9.4% 증가)에 달하고, 중국으로의 총 수출이 1,040억 달러(2010년 대비 13% 증가)에 이르면서, 두 나라간의 총 무역량은 대략 5,030억 달러가 되었다. 미중 총 무역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또한, 1995년 340억 달러에서 2011년 2,950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2> 참조)

표 2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단위: 달러)

년도	미국의 대중 수입	미국의 대중 수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1995	460억	120억	340억
2000	1,000억	160억	840억
2005	2,430억	410억	2,010억
2010	3,650억	920억	2,730억
2011	3,990억	1,040억	2,950억

출처: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의 미국 무역 관련 자료

미중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또한 증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1기 행정부 동안 미국이 WTO에 제소한 14건의 분쟁조정건(dispute settlement case) 가운데 모두 7건이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다(2009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1건, 그리고 2012년 2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7건의 분쟁사례중 모두 4건에 대해 미국을 제소하였다(2009년에 2건, 2011년에 1건, 2012년에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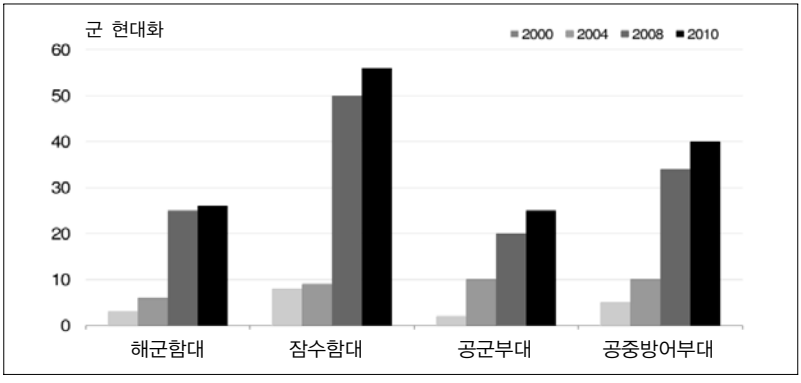
위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규모에서 오는 중국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1기 때보다 좀 더 공격적인 대중국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근절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분쟁사례를 통해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집행부서(Trade Enforcement Unit)'의 신설을 공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중에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잠재적인 무역이

익에 대한 굳건한 상호이해가 존재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철저히 공격적인 무역정책만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잇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중국과의 협력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략경제대화(S&ED)나 미중경제무역연합위원회(JCCT)와 같은 기존의 양국 고위급대화 채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미중간의 군사적 경쟁

미국은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에 대하여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중국은 군대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고, 군사비지출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1>·<표 3> 참조)

그림 1 중국군 현대화율 (단위: %)



출처: 미국 국방부 의회보고서, 2011년 중국의 군사 안보 개발

표 3 2001년~2010년 중국의 군사비지출 (단위: 10억 달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39.5	45.9	49.8	55.2	62.1	72.9	84.1	92.7	110.0	114.0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0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미 국방부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반개입작전(counter-intervention operation)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의 고강도 지역적 군사활동의 수행 능력 제고"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능상 이 임무는 "중국의 군사적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분쟁에 개입하려는 외국군대(예를 들면, 미군)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24]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분쟁중인 남중국해의 해양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을 비롯한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미국의 주요 안보관심사가 되었다. 2010년 7월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 관한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명한바 있다. 미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익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국제법에 대한 존중, 운항의 자유 및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25]이라고 규정하였다. 국무부는 또한 2012년 8월 3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세운 것에 대해 "분쟁국 간 견해차를 좁히려는 공동의 외교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이 지역에서의 갈

24-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2012, p. 28 <http://www.defense.gov/pubs/pdfs/2010-CMPR-Final.pdf>.

25- U.S. Department of State, "Patrick Ventrell, Acting Deputy Spokesperson, Office of Press Relations: Statement on the South China Sea," August 3,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2/08/196022.htm>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위"[26]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을 비난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군대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봉쇄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관계(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집단 능력과 역량(collective capability and capacity)'을 확고히하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반(反) 접근/지역거부전략(A2/AD)'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 해군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비록 미국 정부가 군비증강과 군현대화를 토대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아태지역에서의 안보현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게 될 것이다. 2011년 7월에 미 합참의장인 마이클 멀린 제독은 "미국과 중국은 지역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더 큰 군사력에는 반드시 더 큰 책임과 협력, 그리고 투명성이 뒤따라야 한다"[27]고 덧붙였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서의 상호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초반, 부시 행정부는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인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

[26]- *Ibid.*

[27]- Voice of America, "Top US Officer Urges China-US Security Cooperation," *Voice of America*, July 9, 2011 <http://www.voanews.com/content/top-us-officer-urges-china-us-security-cooperation-125288608/142055.html> (searched date: January 15, 2013).

거부하는 대신,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 2월에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차 방한 도중 중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중국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조직하고 개최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중국측에 다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파월 전 장관은 일본을 다자회담의 주최국으로 하자는 제안을 듣고 난 후, "중국이 개최국으로 더 적합하고, 미국은 단지 참가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28]

그 후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해 발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토마스 크리스텐슨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008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요 외교정책 발의안에 대해 중국이 전례 없이 많은 사안에 대하여 지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한다는 조항과 함께 '10·3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합의문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29]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이 협상을 이용한 '당근'보다, 강력한 제재나 군사적 압박과 같은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28- Charles L. "Jack" Pritchard,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29- Thomas J. Christensen, "Shaping China's global choices through diplomacy," Statement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March 18, 2008 <http://2001-2009.state.gov/p/eap/rls/rm/2008/03/102327.htm> (searched date: January 15, 2013).

따라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미중간의 안보협력관계는 다음과 같은 뜻밖의 요인들로 인해 깨질 수도 있다.

첫째는 6자회담의 진행과정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조가 긴밀히 잘 유지되고 있지만, 양국 간 이러한 협조 관계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아직 요원하다. 게다가 동북아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비난, 비관론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만일 6자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미중 안보협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회담이 유감스러운 결과로 끝나거나 건설적인 성과가 없다면 미국과 중국은 안보를 위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과 2013년 2월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존 케리가 획기적인 대북관여정책을 채택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안보협력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가 했던 것처럼 북한의 "체제전환"을 다시 주장한다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향후 미중 간 경쟁관계의 특성이다. 동북아와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 중국이 '강대국' 혹은 심지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는 '미국의 세력이 쇠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30] 미국의 전략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자기 고민에 빠져 쇠퇴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과 과장된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향후 관계에

30- See David P. Calleo, "Unipolar Illusions," *Survival*, Vol. 49, No. 3 (Autumn 2007); Richard N. Haass,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대해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대립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31] 만약 미국인들 사이에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독보적인 지위에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양국 간 안보 공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경쟁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양면정책, 즉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동반자인 동시에,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양면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여러 차례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안들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과 공조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2]고 말했다. 2012년 10월 22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적국인 동시에,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33]라고 말했다.

31- Zhongying Pang, "The Six-Party Process, Regional Security Mechanisms, and China-U.S. Cooperation: Toward a Regional Security Mechanism for a New Northeast Asia?," The Brookings Institution, March 2009, p. 28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papers/2009/3/northeast%20asia%20pang/03_northeast_asia_pang.pdf> (searched date: January 15, 2013).

32-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Jintao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March 26, 2012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2/03/201203262745.html#axzz2HrUIMqlr>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33- Charles Riley, "Debate: Is China a friend or foe?," *CNN Money*, October 23, 2012 <http://money.cnn.com/2012/10/23/news/economy/china-election-debate/index.html>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4. 결론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관여'와 '압박'의 양면적인 전략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적국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규율을 준수한다면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비롯하여 이란 핵확산 방지, 기후변화 문제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지향할 것이지만 통화,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그리고 인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초기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점차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미중 전략경제대화(the United State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고 '전략적보증(strategic reassurace)'을 제안하면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자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강경노선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군사 측면에서 중국의 세력이 증대됨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해 소모적인 군사적 경쟁과 갈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최고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양면적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이중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과 공정무역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경쟁적 전략을 취하는 한편,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협력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우위 억지전략(competitive deterrence strategy)'을 펼 것이

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해 나갈 전망이다.

Ⅳ.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1.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

현재 한미동맹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한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더불어, 소원해진 미일동맹을 보완하고 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며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역시 존재한다. 첫째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2009년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양국 동맹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오바마 2기 행정부와 박근혜 신정부는 향후 4년 동안 한미동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고 난 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장억지정책위원회(EDPC)'를 설립하였다. 그동안의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양국은 비핵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셋째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2013년에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군사지휘체계의 구성방법인데, 한국과 미국은 2013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030년을 목표로 한미동맹의 주요 핵심 사안에 대비하게 될 '디펜스비전 2030(the Defense 2030 plan)'[34]에 합의하였다. 이 계획은 동맹체제 안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어도 이러한 시도는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의 형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전환의 핵심인 이 계획은 외교·국방 장관회의(2+2 회의)와 같은 더 큰 틀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가. 포괄적 전략동맹의 본질 정립

한미동맹은 2009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사항들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켜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끌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임에 틀림없지만 아직까지 동맹전환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두 가지 요인, 태도적 요인(attitudinal factors)과 행동적 요인(behavioral factor)으로 구성되는데,[35] 태도적 요인은 동맹의 목표와 위협인식을 포함한다. 반면, 행동적 요인은 군사 지휘체계와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동맹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인 요인들을 말한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태도적 요인 및 행동적 요인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하다. 태도적 요인의 경우 동맹은 먼저 각자의 국익을 규정해야

34- *Yonhap News*, January 3, 2013.

35- Ole Holsti, P. Terrence Hopmann, and John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s: Comparative Studi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1973).

한다. 이렇게 규정된 이익을 근거로 각각의 동맹국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동맹의 틀 내에서 협상을 통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단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군사지휘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지, 군사기지를 어디에 마련할지 등과 같은 행동적 요인을 결정해야 한다.

미일동맹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한 곳에 모여 외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또한 동맹전환의 촉매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합의문은 동맹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문서화하고, 미일 동맹국이 동맹의 행동적 요인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미일 양국은 각각의 국가 목표를 조정하였는데, 이는 북한, 중국 등과 같은 우려 국가의 목록을 작성하고, 동맹의 이익과 관련된 지역적·전세계적 현안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작전사항에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을 통해 발표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동맹전환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2+2회의'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양국은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재조정해야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북한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적·세계적 목표와 동맹의 위협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2015년에 있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후의 새로운 군사지휘체계와 군사기지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략동맹 2015,' '한미 국방 협력 지침,' 그리고 '전략기획지침'과 같은 새로운 계획들은 방어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들 사이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한미동맹은 좀 더 포괄적인 안보정책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임기동안 한미 양국은 새로 개최된 2+2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지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36]

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방안 마련

최근에 설립된 확장억지정책위원회(EDPC)는 핵무기 및 비핵무기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42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설립된 확장억지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7]

첫째, 핵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강화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 간 핵억지력이 위축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미국의 핵억지력을 낮추고, 이를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방어력의 강화를 통해 대체할 것을 제안했지만, 확장된 핵억지력은 한반도에서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통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미국의 핵억지력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

36- Mark Manyin *et al.*, "U.S.-Sou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010).

37- Cheon Seong Whun, "The Significance of Forming a ROK-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KINU Online Series CO 10-39, 2010.11.2).

에 의존한 전통적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러한 북한의 공격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핵억지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대신할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력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핵억지력의 규모가 축소되면 『핵태세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핵무기 사용 배제는 실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때 비현실적이다. '소극적 안보보장' 배제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혹은 파트너에 대한 재래식 혹은 생화학무기 공격에서는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같은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현재의 한반도정세와 동아시아의 핵안보 질서를 고려하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무기로 다양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제공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같은 여러 가지 안보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핵억지력의 강화를 제안한다. 사실 한미 양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와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체제(U.S. Regional Missile Defense, MD)'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확장억지정책위원회는 정보공유 협력 증진 방안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미사일 방어체제의 운영수단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는 PAC-3와 같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하여 최대 100km의 고도까지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도입하면 한국은 최소한 저고도 방어(lower-tier defense)능력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미국 MD체제의 목적은 북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고고도·중고도·저고도의 전 범위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사일 문제가 중국과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비용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MD체제가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론 등을 의식해 그 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참여를 주저해 왔다. 하지만,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가 저고도 방어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상호 협조함으로써 정보공유와 운영수단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핵억지력과 비핵억지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확장억지정책위원회(EDPC)는 비핵억지력이 현재의 핵억지력을 어느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핵억지력과 비핵억지력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대비

한국은 최근 미국 재정부족 사태 이후 미 상원에서 제기된 미국 방위비 분담에 관한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2012년 초에 발간된 '국방전략지침(the Defense Strategic Guidance)'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관한 중요한 문서로 미국의 국가재정 부족 사태로 인한 국방비 삭감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대아-태지역 무역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한때 이 지역에서 차지했던 전략적 우위를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방전략지침의 여파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015년에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되고 나면, 한국은 한미 연합군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두 가지 중첩된 갈등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앞으로 국방에 대한 부담 증대를 우려하게 되겠지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 규모를 줄일 것이고, 이는 불가피하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제 5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013년까지 유효하고, 제 6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같은 해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라.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한국이 환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후의 군사지휘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미연합사(CFC)를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로 대체하려는 지금의 계획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이 많은 다수의 미 육군 장교들이 동맹군사협조본부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동맹군사협조본부의 현 체계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신속한 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6월에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38] 결과적으로, 2012년 10월 24일에 열린 제 44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략동맹 2015'의 틀 내에서 동맹군사협조본부의 대안을 찾기 위한 공동조사에 합의하였다.

38- *Chosun Daily,* June 14, 2012.

주요 의제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운영과 효율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사이에서의 공조방안이다. 만일 현재의 연합사 지휘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선택 가능한 방안은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총 책임을 맡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안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휘체계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둔 형식, 이른바 '미니 연합사(mini-CFC)'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미동맹과 중국

한국이 해결해야할 또 다른 도전적 과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외교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교체기에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정치 딜레마는 주로 한미동맹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대국이고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신형대국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의 외교정책 경향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39]

39-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한석희,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분석: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18권 4호 겨울호(세종연구소), 2012, pp. 39~43 참조.

우선, 한국은 이념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까지도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치엘리트와 일반국민들이 여전히 모든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환기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중 하나가 친중국정책과 친미국정책 사이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정책을 철저하게 이념을 떠나서 국익을 바탕으로 추구해야 한다.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의 이면에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 깔려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다각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제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사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의 부산물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에도 북중동맹의 틀을 깨려하지 않는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기의 순간에 중국이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도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중국도 한국의 외교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통일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 될 것을 염려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buffer state)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방식은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동북아의 현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될 국가임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경제 규모면에서나 정치적·경제적으로 북중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다각적 외교 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외교정책을 예로 들면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중국과 관계를 맺으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미동맹에 뿌리를 둔 채 전략지역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셋째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정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5개년 계획'과 같은 중국의 정책 구상, 2011년 '양회'를 통해 드러난 중국 5세대 지도부 인선과 중요 안건의 윤곽에서 볼 수 있듯, 시진핑 총서기는 내수와 소비의 진작,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같은 국내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구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이유는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국익이 불가피하게 자국의 국경 밖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외교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총 생산량이 2010년에 1조 6,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보다 겨우 1,000억 달러 더 많은 양을 기록하는데 그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즈음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이후 중국 외교정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매력(PPP) 기준으로 산출한 중국의 실질 경제 총생산이 2016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정치변동에 촉각을 세우고 한미동맹의 강화에 따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의 특정한 문제에 관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2009년 이후로 오랜 동맹국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되었지만, 한미 양국은 아직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이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전략적 관계인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앞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6자회담을 확대함으로써 전략적 공통성을 찾아야 한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사이에서 한국은 융통성 있게 각각 다른 국익과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협력 매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형태인 3자 소(小) 다자주의가 한중 사이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를 아우를 수 있는 안보협력 매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의 6자회담의 틀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안보협력 수단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각각의 참가국들이 얻을 수

있는 국익들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두 강대국,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국익에 손실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6자회담의 목적을 북한의 비핵화에 두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의 이해와 정책 목표를 세우고 한반도가 미중 간의 외교 갈등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좀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2009년에 한미 양국의 두 지도자가 승인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의 역할과 기능이 한반도에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중대한 전환이 역사적으로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은 오늘날 동북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20년 간 지속되어 오면서 점차 쇠퇴해가고 있던 동맹관계가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맹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만하다. 한미동맹이 세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한 것은 한미 양국을 위한 '윈-윈 전략'이었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다양한 세계적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미일동맹이 소원해진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수많은 과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경제 및 외교, 그리고 군사분야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는 점에서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바로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2013년은 중요한 변화의 해이다. 여러 국가들의 지도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냉전시대의 논리에 근거한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떨쳐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익에 근거를 둔 안보정책을 펼쳐야 하고, 전략적 외교를 통해 국익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과의 견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대북한 관여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의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한국의 신정부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대북한 외교정책: 지속인가 변화인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탈냉전기 미국의 가장 성가시고 끈질긴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클린턴, 부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전략적·경제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아시아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동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영토에 수만 명의 미군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물론,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국가의 경제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이익을 보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과 외교 전략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국과 미국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미중 간의 관계를 특히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왔다.[40]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2009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이른바 '불량국가'의 지도부에 대해 관여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군사적 도발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줄 때까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략적 인내,' 즉 엄격한 관여

40- Emma Chanlett-Avery and Ian E. Rinehart,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012), p. 4.

정책으로 조정되었다. '전략적 인내' 전략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일 때까지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무기수송 차단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41]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미국이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 제공을 대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추진되었다.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전망은 바로 미국이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내'라는 강경책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무조건적인 대화에 초점을 둔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북미 간 적극적인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하여 '대화와 압박'을 조합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반응과 비핵화의 의지에 따라 융통성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세계 제 2위 경제대국(G2)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경제·군사·정치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양상은 오바마 1기 행정부동안 줄곧 유지되어 왔다. 2013년 1월에 새롭

41- *Ibid.*, p. 5.

게 구성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체제에 맞춰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만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처럼 대북강경책을 취함으로써 북한과 갈등관계를 형성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새지도부와의 대립이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시행하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과거 대북강경책을 채택함으로써 야기된 시진핑 지도부와의 라이벌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강조하며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관여정책적 접근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국과 협력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다.

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응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연한 대북 관여정책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지구관측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미국은 대북한 관여정책을 중지하였음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했던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다시 말하면, '2·29 북미 합의'를 통해 – 북한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인 –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는 불투명해졌다. 오바

마 행정부는 '2·29 북미 합의' 중단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 당시 실종 미군의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지역을 수색하는 계획을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중단하였다. 위의 예들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유연한 대북 관여정책을 채택하는 대신, 철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고찰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적대적 관계의 국가에 제재와 보상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적인 전략을 적용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봉쇄'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성향의 공화당과 '관여' 정책을 선호하는 진보성향의 민주당의 정책 사이에서 공방중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지 또한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이 기꺼이 변화할 것이므로 북한이 적응하고 변화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양당 간의 견해차를 상호합의를 통해 극복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외교 전략이다. 전략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방지,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그리고 자국의 경제이익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경제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과도 관

련이 있다. 또한, 대동아시아 전략은 한미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경향은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그 목표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동아시아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세계-동아시아-한국 전략의 연장선 상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여타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미중 관계와 한미동맹 등과 같은 상위 전략의 틀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의 정책과 미국의 대동아시아와 대한국 전략의 핵심 변수들, 즉 중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정책 및 대중국 정책 등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 대안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포함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나 국가를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 전쟁의 시작은 대개 새로운 지역패권의 등장 또는 현상유지와 관련이 있음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군사력을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 인도·파키스탄의 핵문제와 관련해 군사력을 투입하기보다는 경제제재를 선택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중국의 명시적·암묵적 대북지원 때문에 전면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미국이

군사적 대안을 선택하기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불량국가'에 대한 군사력 동원의 대안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과거 미국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해 보면 정밀타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나 급변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군사력 동원 방안을 배제했을 때 미국정부는 '인내 및 무시, 관여, 그리고 제재 및 봉쇄' 정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봉쇄정책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북미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약 미국이 봉쇄정책을 계속 진행한다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미 불안한 한반도 평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도정세는 무력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대북 경제제재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미국정부는 현재 북한정권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대북경제제재도 해제할 것이다. 비록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한국에 대한 국지적 도발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봉쇄'와 '전략적 인내'로 기울었지만, 미국은 관여정책의 여러 가지 방안들 역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시'라는 대안의 최대 단점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대북 '관여'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며, 대북 경제적 지원 및 북미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현상유지: 은하 3호 로켓발사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장거리 로켓을 통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도발적 행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곧 이어 북한은 12월 15일 마침내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게 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한편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직후인 2009년 4월 은하 3호를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고 2012년 4월, 또 한 차례 은하 3호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발사 후 공중 폭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세 번째 은하 3호 로켓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자국의 로켓 준비 및 발사능력과 생산시설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러한 북한 로켓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8월에 북한이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한 후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미국의 반응에 따른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공동성명의 채택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엄청난 강도로 1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했지만 결국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오바마 1기 행정부 역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세 차례 로켓을 발사하자 대북제재를 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고, 유엔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더 이상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집권 2기에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에게 최근의 북한 로켓발사 성공은 북한에 변화를 강요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하던 과거의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고 역대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핵 및 미사일 협상을 종결지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이익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확산방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일본의 우경화, 일본과 중국의 대립, 남북한의 대립, 북한의 젊은 새 지도자 등, 이 모든 요인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과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그 이유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국의 '핵없는 세상'이라는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불안정을 조성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도 관련되어 있어 차후 다른 지역에서 핵무기 테러로 발전할 가능성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어떠한 정부라도 최우선순위 정책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핵없는 세상'을 모토로 핵안보정상회의를 추진한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

서 '전략적 인내' 정책에 근거한 대북제재와 2·29 합의 이행에 대한 압박이 북한에 계속 가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향후 4년의 임기를 추가로 확보해 놓은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태까지의 북미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의 로켓발사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단식 로켓발사 성공으로 '탄도 미사일 탑재 핵무기 능력(long-range nuclear capability)'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가져올 위협에 대해 세계가 집중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협상력을 더욱 제고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12월 12일 국무부를 통해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재개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북한의 로켓발사 성공은 '불량국가' 혹은 이른바 '악의 축'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미국에 확인시킨 셈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근간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태도를 바꾸고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그들의 방식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미사일 발사 성공이 북한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3.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한국과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현재의 북한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미 양국은 또한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양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다른 상황에 대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 양국은 이전처럼 그것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인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대화의 반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009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길은 "북한 주민들을 평화와 경제적 기회로 이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 완전히 융합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의 정책으로 구상하게 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외에도 현재 북한 내부에서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북한에 보상이 주어진다 해도 협상의 결과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공조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과거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큰 중요성을 두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13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의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기꺼이 북미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을 위해 에너지를 비롯 여타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은둔국가인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2009년 1월에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에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포기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지지 않자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그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결의 1718호의 위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조정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음은 물론, 북한을 '제재 대상국(sanction list)'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의 최근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비난이 있은 후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6자회담 탈퇴와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연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지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또한 같은 해 5월 25일 2차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6월 13일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제 '전략적 인내'로 바뀌었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스테판 보스워스, 미국 대북 특사가 2009년 12월 8일 북한을 방문한 뒤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물론, 천안함까지 공격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억지력과 경제 제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략적 인내를 장기간 추진하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미국이 무시할 수도 용인 할 수도 없는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사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세상에 공개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후, 미국은 기존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국의 현 정세를 반영하고 북한이 다른 도발행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2012년 4월 결국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및 12월 성공을 거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불안감이 이러한 관용의 분위기를 또 다시 어둡게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모순이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한미 간 의견 불일치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기는 하나 이는 6자회담과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고,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1년 4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나는 결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공식발표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과거의 대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도 한미동맹은 과거와 같이 견고해 보이며,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견해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

박근혜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한국은 인도적인 대북 경제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방식으로 북한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전망이다.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점진적인 비핵화과정을 이행하고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튼튼한 안보태세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2004년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북한과 대화하고 6자회담을 포함하는 외교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케리 국무장관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이어서 북한에 이중적인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이 그 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미국

과 적극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같이 한국이 북미 대화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을 보일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새로운 군 지휘체계가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통합 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연합 지휘체계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지휘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기조는 '신 관여정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1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당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합리적이고 점진적이며 수렴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것이다. 미국은 '신 관여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대북정책으로 추진됐던 '무시' 및 '압박,' '제재'와는 별도로,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매커니즘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다자회담의 특징 중 하나인 합의의 어려움과, 북한의 불참으로 인한 장기적인 교착상태, 중국의 대북 비호,[42] 그리고 협상 성공여부의 불투명성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다자적 접근법을 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박근혜 차기 대통령 집권하의 한·미·중 3자회담은 참가국들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교적 유용한 대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6자회담은 여전히 몇 가지 장점들을 제공하는데[43] 이는 6자회담 안에서 3자, 4자, 5자와 같은 소(小) 다자적 접근이나 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미국은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고 미국의 자긍심과 존엄이 손상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참여하는데 명분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북 압박과 제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이 북미 간 양자회담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경제적·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다른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다. 비록, 6자회담이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데

42- Dong Ryul Lee,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June 2010), pp. 17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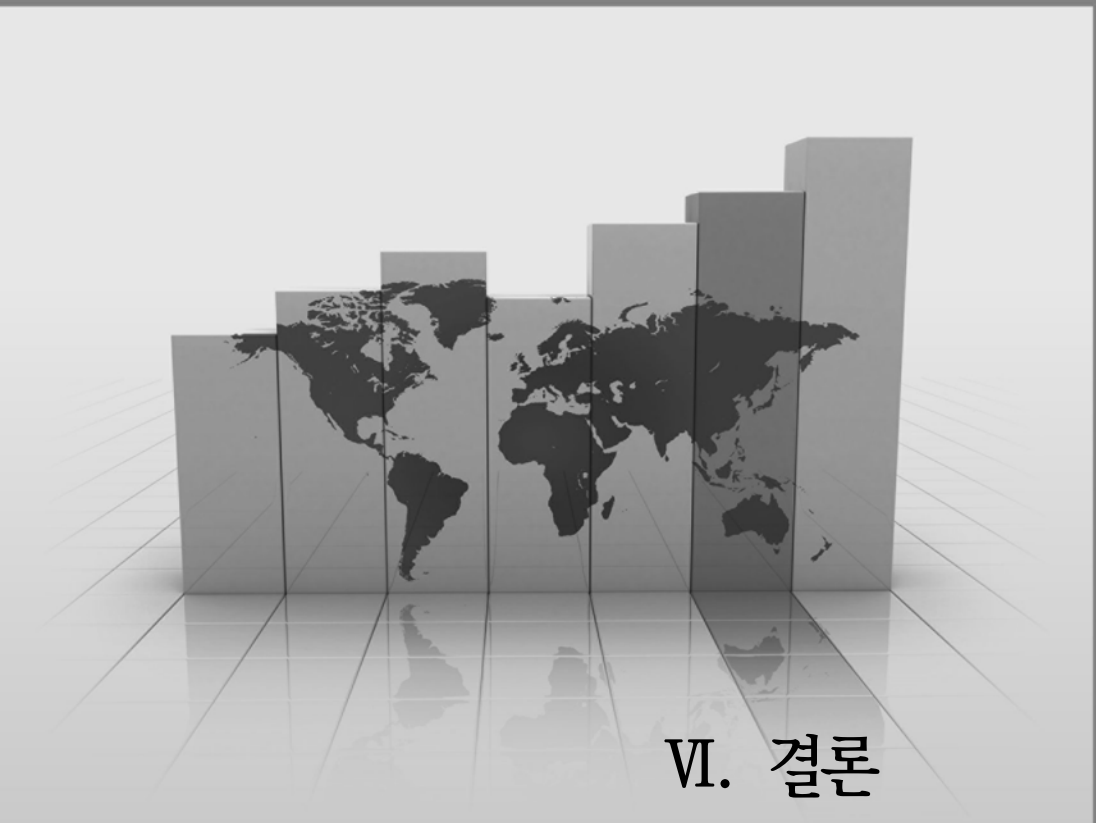
43- Yongsoon Kim, “Preparing for Institution-Building of Six-Party Talks in Northeast Asia,”『동서연구』, 제 22권 2호(동서문제연구원), 2010, pp. 277~313.

유용한 대책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소(小) 다자 구조의 참가국들과 공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다. 물론, 북미 양자회담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미국은 다자 구조와 소(小) 다자 구조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임을 공동으로 떠맡는다는 원칙하에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비핵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동안 '신 관여정책'이라는 새로운 대북 외교정책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 그에 따른 정책 대안, 중국과 한국의 대북 입장, 미국에서의 정치적 약속 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더욱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 '전략적 인내'를 근거로 한 '대화'와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중국과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의 신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달리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정책공조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조했으므로,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도 그와 맥을 같이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좀 더 회유적인 정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반응 혹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Ⅵ. 결론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을 포함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의 대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에서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에 기초한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접근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군사·정치적 이익의 측면에서 아시아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지역 내 패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일 관계가 소원한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미동맹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몇 가지 남아 있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규모 재정지출 축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데 능력의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재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한미동맹은 향후 4년 동안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 모두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협상과 대화'로 특징되는 관여정책(engagement)과 '전략적 인내'로 대

표되는 강압정책(coercive)을 결합해 이 두 개의 정책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강조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오바마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좀 더 관여 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해법 또한 '북한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중순에 장거리 미사일로 쉽게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초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경제제재와 유엔 결의안 등을 포함한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마련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존 케리 전 상원의원을 힐러리 클린턴을 대신하여 신임 국무장관으로 지명하였다. 케리 전 의원은 '전략적 인내'를 지지했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달리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하거나 혹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와 국제적 행동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중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변화 의지와 태도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동안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비록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조속히 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탄력을 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와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미 간의 공통된 이익에 대한 합의를 고려해보면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한미 양국 간의 정책공조만이 평화적이면서 성공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Fontaine Richard and Kristin M. Lord. *et al*. *America's Path: Grand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2.

Holsti, Ole R., P. Terrence Hopmann, and John Sullivan.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s: Comparative Studi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1973.

Indyk, Martin S., Kenneth G. Lieberthal, and Michael E. O'hanlon. *Bending History: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2.

Pritchard, Charles L.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2. 논문

한석희.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분석: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국가전략』. 제 18권 4호 겨울호(세종연구소), 2012.

Calleo, David P. "Unipolar Illusions." *Survival*. Vol. 49, No. 3, Autumn 2007.

Chanlett-avery, Emma and Ian E. Rinehart.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012.

Haass, Richard N.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Kim, Yongsoon. "Preparing for Institution-Building of Six-Party Talks in Northeast Asia."『동서연구』. 제 22권 2호(동서문제연구원),

2010.
Lawrence, Susan V.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012.
Lee, Dong Ryul.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June 2010.
Manyin, Mark. *et al.* “U.S.-Sou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010.
Manyin, Mark E., Stephen Daggett, Ben Dolven, Susan V. Lawrence, Michael F. Martin, Ronald O’Roukre, and Bruce Vaugh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012.

3. 기타자료

Yonhap News, January 3, 2013.
Chosun Daily, June 14, 2012.

Cheon, Seong Whun. “The Significance of Forming a ROK-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KINU Online Series CO 10-39, 2010.11.2.
Christensen, Thomas J. “Statement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Shaping China’s global choices through diplomacy.” March 18, 2008 <http://2001-2009.state.gov/p/eap/rls/rm/2008/03/102327.htm> (searched date: January 15, 2013).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Donilon, Tom. “America is back in the Pacific and will uphold the Rules.” *Financial Times*. November 27, 2011 <http://www.ft.com/cms/s/0/4f3febac-1761-11e1-b00e-00144feabdc0.html#axzz2HrWQ

MyNa>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Ekert, Paul. “Clinton declares America’s Pacific Century.” *Reuters*. November 10,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11/11/us-apec-usa-clinton-idUSTRE7AA0GJ20111111>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US trade data.” <http://www.gtis.com/english/> (searched date: February 11, 20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September 20, 2011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index.aspx>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Kerry, John. “U.S. and North Korea: The land of lousy options.” *Los Angeles Times*. June 26, 2011 <http://articles.latimes.com/2011/jun/ 26/opinion/la-oe-kerry-north-korea-20110626>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Nolan, Robert. “Chuck Hagel, in His Own Words, on U.S. Foreign Policy Challenges.” *U.S. News & World Report*. January 3, 2013 <http://www.usnews.com/opinion/blogs/world-report/2013/01/03/chuck-hagel-on-afghanistan-syria-and-china>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Pang, Zhongying. “The Six-Party Process, Regional Security Mechanisms, and China-U.S. Cooperation: Toward A Regional Security Mechanism for a New Northeast Asia?.” *The Brookings Institution-CNAPS Visiting Fellows Working Pager*. March 2009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papers/2009/3/northeast%20asia%20pang/03_northeast_asia_pang.pdf> (searched date: January 15, 2013).

Riley, Charles. “Debate: Is China a friend or foe?.” *CNN Money*. October 23, 2012 <http://money.cnn.com/2012/10/23/news/economy/china-election-debate/index.html>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Rogin, Josh. “Chuck Hagel does not like sanctions.” *Foreign Policy*. December 17, 2012 <http://thecable.foreignpolicy.com/posts/2012/12/

17/chuck_hagel_does_not_like_sanctions>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Background paper on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 2010.”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factsheet2010> (searched date: February 12, 2013).

Tan, Yingzi. “Kerry Tipped to replace Clinton.” *China Daily USA*. September 5, 2012 <http://usa.chinadaily.com.cn/2012-09/05/content_15735336.htm>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Moving America Forward: 2012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September 4, 2012 <http://www.democrats.org/democratic-national-platform>.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July 2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November 17,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wp_login_redirect=0>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Jintao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March 26, 2012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2/03/201203262745.html#axzz2HrUIMqlr>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The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The 2004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for America.” July 27, 2004 <http://www.presidency.ucsb.edu/papers_pdf/29613.pdf>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U.S. Department of Commerce, Census Bureau, Foreign Trade Division. “Top U.S. Trade Partners.” <http://www.census.gov/foreign-trade/

statistics/highlights/toppartners.html>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2012 <http://defense.gov/pubs/pdfs/2010-CMPR-Final.pdf>.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pdf> (searched date: February 12, 2013).

U.S. Department of State. “Patrick Ventrell, Acting Deputy Spokesperson, Office of Press Relations: Statement on the South China Sea.” August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2/08/196022.htm> (searched date: December 12, 2012).

Voice of America. “Top US Officer Urges China-US Security Cooperation.” July 9, 2011 <http://www.voanews.com/content/top-us-officer-urges-china-us-security-cooperation-125288608/142055.html> (searched date: January 15, 2013).

Walton, Don. “Chuck Hagel, ambassador explore changing U.S.-Chinese relationship.” *Government & Politics.* November 10, 2010 <http://journalstar.com/news/local/govt-and-politics/chuck-hagel-ambassador-explore-changing-u-s--chinese-relationship/article_e082f10c-ed52-11df-b94e-001cc4c03286.html> (searched date: January 12, 2013).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Ⅰ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Ⅱ)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Ⅱ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3,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 Huh Moon Young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3340
9 788984 797048
ISBN 978-89-8479-704-8